

## 토론문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공존 체제 구상과 과제

최 익 재 기자

(중앙일보)

1. 윤경우 선생님이 발표해주신 “신 한반도체제”의 현실화를 위한 국가성과 확장성 논의’를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윤 선생님의 발표 내용 중 특히 ‘평화’가 남과 북이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이자 정의이며 경제적 공동번영의 토대가 된다는 대목에 공감합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첫째, 남북한의 상호 국가인정이 과연 남북한 자체적으로 가능할지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남북한의 적대시 정책의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것은 경험으로 체득한 안보적 위협에 대한 대응입니다. 현재 남한이 갖고 있는 안보적 공백은 주한 미군이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호 국가인정을 통한 평화 정착을 위해선 상대에 대한 적대적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겐 주한미군의 주둔과 미국의 핵우산 또는 전략무기의 영향력 하에 남한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적대적 행위로 간주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를 무시하고 상호 국가인정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으로선 주한 미군과 한·미 연합훈련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 남한의 입장에서선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북한으로부터의 일체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상호 국가 인정은 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

런데 서로가 군사적 위협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국가 인정을 한다면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남한 국민들의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완전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상호 국가 인정이 어떻게 군사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살펴볼 때 드는 의문점입니다. 남북한 간의 상호 국가 인정이 이뤄진 이후 동북아 정세를 추론해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선 그다지 환영할 만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강력한 군사적 동맹 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중국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할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조야에선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까에 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 등을 활용한 중국 견제에도 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미 관계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정책은 지금보다 덜 우호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에 대한 유무형적 기회비용도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체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 김상준 선생님의 ‘얇은 평화인가, 두터운 평화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코리아 양국체제론’에 대한 설명도 한반도 통일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양국체제론’은 잘 아시다시피 ‘분단체제론’을 통해 통일문제를 다뤘던 백낙청 선생님 쪽과 논쟁이 있었던 이슈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분단체제론과 비교해서 이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양국체제론이 김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신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필요하다면 양국체제론 자체에 대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묻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선생님은 남북정상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하고 완전한 법적 효력을 발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수였던 지난 2018년 이 아닌 다수가 된 지금 2020년에도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위한 상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현실적 상황 때문일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행했을 경우 따르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숫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비준을 강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듯 남북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국민 여론’입니다.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된 사회에서 여론을 무시한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판문점 선언의 유효성이 대한 문제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의해 문을 열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 19개월 만에 북측에 의해 폭파돼 사라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폭파 3일 전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판문점 합의를 북측에서 먼저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우리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북측이 이렇듯 쉽게 판문점 합의의 상징 같은 존재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해버린 것은 이미 판문점 합의 자체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문점 합의의 국회 비준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둘째는 김 선생님의 양국체제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1민족 2국가 체제를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의 핵문제는 어떻게 다뤄져야 할까요? 비핵화된 이후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핵화 이전의 북한이라도 우리가 국가로 인정을 해야 합니까? 비핵화 이전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고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